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법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강제적인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강제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려면 법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 적용하는 과정은 이른바 ‘법률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은 대전제로, 구체적인 사건은 소전제로 놓고, 법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B가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 발각되어 A가 B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자. ㉢ 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법 규정에 ㉣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법정에서 B의 행위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해당되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 B의 변호사는 B가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것이므로,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사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참고하여 B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관은 그에 맞는 결론,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이 검사, 변호사, 법관은 모두 ‘어떤 사건이 어느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다룬다.

그런데, 많은 혼란을 거친 법률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법 규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규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다른 형법 규정을 가져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 대등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재판에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찾아내서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즉, 법 규정 찾기에 실패해도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면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사재판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 민사재판 : 개인 사이의 경제적·신분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

31. 위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이다.
- ② 동일한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 ③ 많은 혼란을 거친 법률가들도 때로는 법 규정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 ④ 민사재판에서는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도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⑤ 형사재판에서는 적당한 법 규정이 없으면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

32. ㉢과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 ②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 ③ ㉢과 ㉤이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 ④ ㉢과 ㉤이 소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 ⑤ ㉢이 자신이 세운 대전제를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3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을'로부터 '병'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병'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갑'과 '을'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료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갑'이 이를 이용한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① '갑'은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있겠군.
- ② '을'은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군.
- ③ '병'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군.
- ④ 대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세운 대전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군.
- ⑤ 앞으로 '갑'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군.

34. 위 글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담긴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② 명백한 범죄행위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 ③ 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법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 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5. ㉠ ~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분쟁(紛爭) :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 ② ㉡ 적용(適用)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씬.
- ③ ㉢ 해당(該當) :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 ④ ㉣ 대등(對等) :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함.
- ⑤ ㉤ 조정(調停) :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31 ⑤ 32 ④ 33 ① 34 ① 35 ⑤

[31 ~ 35] 사회 제재

<출전> 이상돈 외, 「MT 법학」

31. [출제의도]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고 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과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B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은 B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은 B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잠시 빌려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소전제를 서로 다르게 본 것이다.

[오답풀이] ③ ㉠과 ㉡ 모두 동일한 법 규정을 세운 뒤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으므로 대전제는 같게 보고 있다.

33. [출제의도]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을'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을'의 행위는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개인 사이의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민사재판이므로 '병'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④ '갑'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갑'의 행위(소전제)는 검사가 내세운 법 규정(대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갑'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갑'의 행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4.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도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 담긴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는 범죄 행위가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명백할 경우에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법언(法言)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35.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조종(操縱)'이다. '조종'은 '분쟁을 중간에 서서 화해시킴'이란 뜻을 갖고 있다.

고1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청소년만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할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거나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사 능력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 능력의 판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 취급(取扱)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가 있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 인식(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이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가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 반환(返還)해야 한다. 상품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미납 요금이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 지급(支給)하면 이는 계약을 추인(追認)*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유 재산의 소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催告權)을 ㉥ 부여(附與)하고 있다. 이때 유예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 사업자가 미성년자 측의 추

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추인 : 지나간 사실에 대해 추후에 인정하거나 동의함을 뜻함.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계약은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
- ② 친권자와 후견인은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나이는 법적으로 의사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성인이 한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4.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결과’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항목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인터넷 법률 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의 취소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면 아래에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 항목	선택	
	예	아니요
㉦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가요?	✓	
㉧ 부모님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나요?	✓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나요?		✓
㉩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을 했나요?		✓

결과 로 인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35. ㉠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인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 ② 국가는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④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미성년자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함.
- ② ㉡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③ ㉢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 ④ ㉣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⑤ ㉤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31	④	32	①	33	①	34	④	35	③
36	⑤	37	②	38	②	39	③	40	①

[33 ~ 36] (사회) 법무부, 『청소년과 계약』

이 글은 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따라서 민법은 의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법은 이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문단에서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하였다. 또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이를 통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③ 법적으로 만 20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만 20세 이상은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나이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④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취한 어른과 같은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최고권과 철회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㉗에서 응답자는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모님(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는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㉘의 응답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㉙의 응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㉚의 응답자는 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㉛에서 청소년이 계약을 할 때 어른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있다. 2문단을 보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성년

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이유는 1문단에 나오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3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부여(附與)'는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등을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등을 붙여 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의 뜻을 지닌 어휘는 '부착(附着)'이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대표적인 법에는 ㉠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면서 제한이 생겼다. 그 결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A]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한다.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한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는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A]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민,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피의자 :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심사하는 행위.

* 점유자 :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37.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든다.
- ②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법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개인이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 ④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 ⑤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이 수정되었다.
- ②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용한다.
- ③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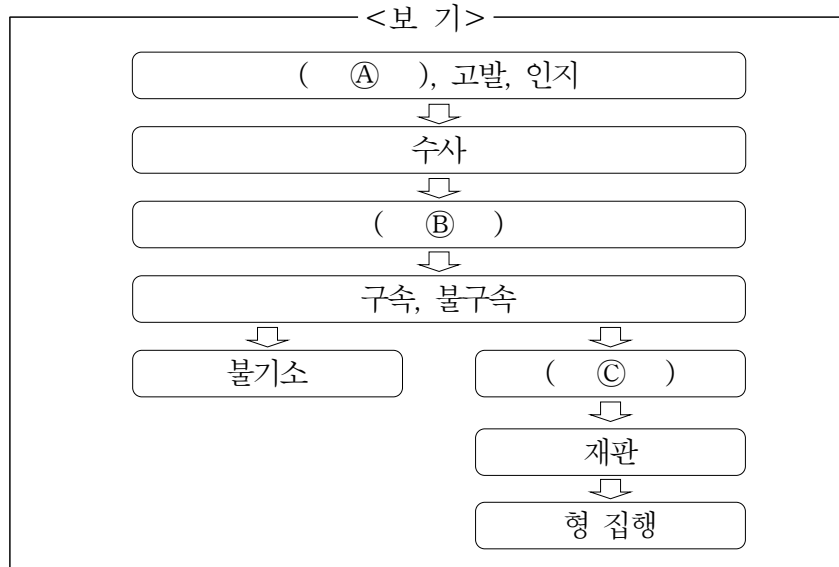
청년사범 편집

- ④ 20세기에 들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개인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근대 사회에서 형성되었다.

39. ㉠과 관련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
- ②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 ③ 형법의 반은 이익보다는 해를 끼칠지 모른다.
- ④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⑤ 철학 없는 법학은 출구 없는 미궁이다.

4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 ②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이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을 해야 한다.
-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의 여부를 결정한다.

41. 윗글과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 기 2>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민법 제759조 ①에 따르면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
- ② 민법 제759조 ①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형법 제257조 ①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형법 제257조 ①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C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⑤ 형법 제257조에 향후 B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B를 처벌할 수 없다.

		37	⑤	38	③	39	④	40	②
41	④								

[37~41] 사회

* 출전: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해제] 이 글은 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법이란 사회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제성을 지닌 규칙이다. 대표적인 법으로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이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며 인간 이외의 것들은 모두 물건이므로 법적 권리가 없다.

37. [출제의도] 핵심 개념 파악하기

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였을 때에만 발휘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③ 법이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기 힘들다. ④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민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답풀이] ①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민법이 악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면서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되었다. ②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서 다툼을 해결할 때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④ 20세기에 들면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수정된 원칙이 민법에 적용되고 있다. ⑤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형성되었다.

39.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해진 범죄만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절차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는 고소, ㉡는 체포, ㉢는 기소이다.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고소는 피해자가 한다. ③ 범행을 실행 중인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소를 할 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원인 반면, 범인의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형법은 유추 적용을 할 수 없으며, C는 B의 점유자이지 신체를 상해한 자가 아니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①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과 B는 모두 물건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 ② 민법 제759조 ①을 유추 적용한다면 C는 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A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형법은 범죄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에 의한 지배'는 결국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법치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의한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이란 군주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간주하였다.

(나)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법을 제정, 집행, 판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하였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재판도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났다.

(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법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치관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비민주적·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 비민주적·권위적 정부가 기존의 법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행하고자 할 경우 법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라) 이 법치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엄격히 집행된다면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흔히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마)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

는 요소만으로는 '법의 지배'의 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2.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근대 법치주의의 등장 배경
- ② (나) : 초창기 법치주의의 특징
- ③ (다) : 형식적 법치주의의 목적
- ④ (라) :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 ⑤ (마) : 현대 법치주의의 지향점

33.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A국은 '움'과 '멘움'이라는 신분적 구별이 있다. '움'은 자본력과 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A국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분립시키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움'에게 독점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움'은 '멘움'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멘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례 2] B국의 '갑'은 추운 겨울 밤 이웃 사람인 '을'이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을'을 방치하고 집에 갔다. 결국 '을'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B국의 사법부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①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에서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②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이 '멘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B국의 사법부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A국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멘움'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⑤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B국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34. 위 글의 논지를 따를 때,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의견은?

- ① 법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법은 지켜야 한다.
- ② 법이 정의로운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
- ③ 법이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32 ③ 33 ② 34 ②

[32~34] (사회) 김도균 외『법치주의의 기초』

32.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 단락은 근대 법치주의가 어떤 문제 의식에서 탄생했는지 설명하는 단락이다. (나) 단락은 초창기 법치주의가 삼권분립을 기초로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했다는 내용이다. (라) 단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이다. (마) 단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락으로서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각 법치주의 특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문에 따르면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법의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만 지켜진다면 그 사회는 이미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위해 어떤 내용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삼권 분립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A국을 두고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절차적 합법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법의 내용이나 실질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멘음’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⑤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갑’이 이웃인 ‘을’의 위험한 상황을 외면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B국의 법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4.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단서는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즉, (마)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형식적 법치주의자의 주장이다. ③은 관습법을 중시하는 태도로 형식적 법치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④는 형식적 법치주의자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극복 방안이 되기 어렵다. ⑤는 법치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상속세, ㉣증여세라 한다. 이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고,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되고,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조카, 백부모, 숙부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는 1, 2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단, 임신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 제도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 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한다.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파트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랐다 해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의 가격인 2억 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 방계혈족 :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옆으로 갈라진 혈족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을 중심으로
- ②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중심으로
- ③ 세금의 공평 부과,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공평한 사례를 중심으로
-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세금의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을 중심으로
- ⑤ 세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2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된다.
- ② ㉡은 ㉠과 달리 납부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③ ㉠, ㉡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다.
- ④ ㉠, ㉡ 모두 적용된 세율이 높으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이다.
- ⑤ ㉠, ㉡ 모두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사망했다. 그에게는 토지와 예금이 있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 ①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내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군.
- ②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
- ③ A씨의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겠군.
- ④ A씨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홀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겠군.
- ⑤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시세를 고려

할 필요는 없겠군.

30. ㉠ ~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② ㉡ :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 ③ ㉢ :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④ ㉣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 ⑤ ㉤ :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현상.

27 ① 28 ② 29 ② 30 ③

[27~30] 사회

<출전> 「상속세와 증여세」(재구성)

개관: 이 글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동일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공제 후의 총액이 같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27. [출제의도]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부의 무상 이전 방법인 상속과 증여의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③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공평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함께 드러난다.

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증여세 납부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상속세는 사망 후에 부과된다. ③ 2문단에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니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⑤ 1문단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예금과 토지를 구별 할 필요 없이 그 둘을 합친 총액에 대해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 끝에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인 태아와 아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③ 4문단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니, 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④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인 홀어머니와 아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⑤ 5문단에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

한다고 했으니,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30. [출제의도] 사전 뜻풀이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의 '대비'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고3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74년 캐나다에서 소년들이 집과 자동차를 파손하여 체포되었다. 보호 관찰관이 소년들의 사과와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담당 판사에게 건의하였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소년들은 봉사 활동과 배상 등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지고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사법 관점의 첫 적용이었다. 이와 같이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상처 입은 피해자, 훼손된 인간관계와 공동체 등의 회복을 지향하는 형사 사법의 새로운 관점이자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인 것이다. 여기서 형사 사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법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형사 사법은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 응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보는 이론으로 형벌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응보형론이 이미 발생한 범죄와 범죄인의 처벌에 치중하고 예방은 미약하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재사회화론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복귀에 두는 이론이다. 이것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여 장래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도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응보형론이나 재사회화론에 입각한 형사 사법은, 법적 분쟁에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면서 국가와 범죄 행위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관점은 범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보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개인 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본다. 지금까지의 형사 사법은 주로 범인, 침해당한 법,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피해자는 무시한 채 가해자와 국가 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대리인에 의한 법정 공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을 조정하는 조정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직접 듣고 죄책감이 들면 그의 감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로 피해자도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 등을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범죄로 피해 입은 공동체를 회복의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본다.

회복적 사법이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사법을 보완하는 차원 정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이론을 절충하여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4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
- ②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
- ③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
- ④ 기존 형사 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벌에 대한 관점
- ⑤ 기존 형사 사법의 관점에서 본 범죄 행위의 의미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범인과 침해당한 법에 관심을 둔다.
- ② 응보형론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③ 재사회화론에서는 응보형론과 달리 범죄인의 교육을 통한 교화를 중시한다.
- ④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 문제 해결에 가해자, 피해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 ⑤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6 <보기>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를 수용한 학생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유죄 확정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게 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를 유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을 감형시킬 목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 ① 국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군.

- ②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는 관심이 적으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겠군.
- ③ 현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동체가 회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 입을 수 있겠군.
- ④ 조정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한다면 그 가해자는 유죄로 간주되겠군.
- ⑤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참가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겠군.

				23	③	24	③	25	⑤
26	⑤								

[사회]

[23~26] <출전>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3.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이해하기

3문단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기존의 형사 사법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분석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밝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비유적 진술을 이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두 이론을 절충하여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① 1문단에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써 1974년 캐나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② 2문단에 지속적인 범죄 증가 현상과 증가하는 재범률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2문단에 기존의 형사 사법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3문단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은 응보형론이다.

- ① 3문단에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주로 범인, 침해당한 법,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2문단에 응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2문단에 재사회화론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응보형론은 형벌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6.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가해자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회복적 사법에 참가하면 진정한 태도 변화와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 ①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볼 때,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이 헌법 정

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유죄로 간주될 수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 증권을 일컫는 금융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한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개인과 금융 기관 간에는 금리를 잘 따져 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매년 5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첫째의 이자는 50만 원이나, 다음 해는 첫째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에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진다.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 금리라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합계는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이면 원리금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가]

금리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따져 봐야 한다.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변한다.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 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변동 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 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또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

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 간의 거래뿐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 명시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합의를 우선시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몇 가지 ㉣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이자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자 지급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둘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모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 줄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을 인적 담보라 하고, 빚 대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 한다. 물적 담보는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셋째, 돈을 갚을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돈을 갚기로 한 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직접 만나 갚기로 할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갚지 못한다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이나 유가 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할 경우 그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 상환 시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이때 자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개인 회생 제도와 ㉦ 개인 파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속적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먼저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가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는 없어진다. 이러한 제도로,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선고를 받기 전까지 채무자와 그 주변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나며, 선고를 받은 후에도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생

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금리의 개념과 방식을 언급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채무자를 위한 법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금리 변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 기관과의 금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 ⑤ 금리 결정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 간의 금융 거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출 기간에 기준 금리가 변하면 고정 금리의 금리도 변한다.
- ②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으로 자산을 증대할 수 없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통화량이 조절되어 경기가 활성화된다.
- ④ 공탁을 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만료되지만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 ⑤ 금융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는 여유티돈 1,000만 원을 2017년부터 예금하기로 하고 금융 상품 중 연 8% 단리 상품과 연 5% 복리 상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연 3%로 예측된다.

*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군.

- ②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겠군.
- ③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실질 금리는 5%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 그 해에 발생한 복리 상품의 이자는 1,05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겠군.
- 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실질 금리가 같겠군.

4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B에게 돈을 빌리고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채무자 A와 채권자 B는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원금은 지정 날짜에 만나서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

- ① A와 B가 인적 담보에 합의했다더라도 B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A의 소유가 아니면 B는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이라도 물적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④ A와 B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이자 원칙에 따라 A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원금 상환 날짜에 B가 나타나지 않아도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A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빚이 면제된다.
- ②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 ⑤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42. ㉠ ~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조선은 유교가 기간이 되는 도덕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 ② ㉡ :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
- ③ ㉢ :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 ④ ㉣ : 장마 때에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 그 나라는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37	②	38	⑤	39	⑤	40	②
41	①	42	①						

**** 사회 ****

□ 출전: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김현철 외, <한국인의 법과 생활>

37. [출제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2문단에서 금리의 개념 및 금리의 방식에 따른 단리와 복리에 대해 설명하고, 3, 4문단에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고정 금리, 변동 금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5, 6문단에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에 관한 법률적 내용, 7문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③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과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은 제시하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고 하였고,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은 금융 기관의 금리에 따라 변동 금리의 금리가 계속 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융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변동 금리도 상승하게 될 것이며,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이다.

③ 4문단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매달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공탁을 할 경우 그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상환 시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3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에서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금리가 연 8%인 단리 상품의 실질 금리는 5%이며, 금리가 연 5%인 복리 상품의 실질 금리는 2%이다. 따라서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금리는 같지 않다.

②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복리 상품의 원리금합계는 1,050만 원이며, 단리 상품의 원리금합계는 1,080만 원이다. 따라서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다. ④ 2문단에서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으므로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한 이자가 50만 원이고 2년이 되는 날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1,050만 원에 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4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6문단에서 채무자는 돈을 갚기로 한 날 돈을 갚아야 하며, 7문단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6문단에서 물적 담보는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은 물적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이자 지급에 합의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4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7문단에서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데,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

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이 면제된다고 하였다.

④ 7문단에서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은 개인 회생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의 의미이다. 그런데 ㉠에서의 '기간'은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을 의미한다. ③ '명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을 의미한다. ④ '유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을 의미한다. ⑤ '상환'은 '갚거나 돌려줌'을 의미한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㉕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㉖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㉗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㉘ 뜻한다.

의무 충돌을 작위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㉙ 나눌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㉚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 ④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의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국어 영역

28.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의무 충돌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 ③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의무만이라도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④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⑤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29. 윗글과 <보기 1>을 근거로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여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 보기 2 >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이 있겠군.

c.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① a ② c ③ a, b
- ④ b, c ⑤ a, b, c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선로에서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역에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한다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 ①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 ③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충돌로 볼 수 있다.
- ⑤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31. ㉠ ~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이곳에서 암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 ② ㉡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꺼어야 했다.
- ③ ㉠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27 ③	28 ④	29 ③	30 ②
31 ⑤					

[27 ~ 31] (사회) 김준혁, '정당화적 의무 충돌과 면책적 의무 충돌'

의무 충돌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의무는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충돌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 상황은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삼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무 충돌은 긴급 피난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1문단에서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2문단에서는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 의무란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위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두 부작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담당 의사가 만약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가 양심에 따라 어느 한 환자를 선택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설은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의무 충돌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㉔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㉑는 '몸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어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의 뜻이다.

㉕는 '방향을 바꾸어 돌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㉒는 '생각이나 기운 따위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의 뜻이다.

㉖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㉓는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㉗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이다. 반면 ㉔는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의 뜻이다.